

2023 코트라 경제논술 시험대비 시사자료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1p~3p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현황 및 시사점 - 4p~6p

EU의 환경규제 - 7p~10p

EU의 배터리 시장 - 11p~16p

*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I.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 USTR은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가 담긴 '2023 Trade Policy Agenda and 2022 Annual Report'를 공개(3.1)
 - '74년 무역법(163조)에 따라 매년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무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례보고서 주목
 - 바이든 통상정책 키워드로, 전년과 유사한 △ 우방 협력 강화 △ 노동자중심무역 △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 △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등 제시
 - '21년부터 의제에 포함된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 목차에서 최상단으로 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제외됨.

II. 보고서 주요 내용

- 핵심 교역 파트너 및 다자기구 협력 강화
 - '23년 최우선 과제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대만, 케냐와의 이니셔티브를 언급
 - WTO 등 다자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참여 연대 강화, 미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APEC)을 통해 우선순위 공고화 전망
-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추진
 - 북미 3국 무역협정(USMCA)을 필두로 노동자 우선 무역 정책 및 강제 노동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 2022년 멕시코 소재 4곳의 사업장에 대해 USMCA 신속대응 메커니즘 발동
- 탈탄소화 경제 달성을 위한 무역의 역할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친환경 목표를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무역 정책 중요성 언급
 - 유럽연합(EU)과의 지속가능한 철강 합의(GSSA) 강조, WTO 수산 보조금 협정, 양자·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탈탄소 노력 강화
- 공급망 탄력성·회복력 강화
 - 팬데믹과 러우사태로 나타난 공급망의 취약성 지적, 공급망 관련행정명령(E.O.14017)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망 시스템 유지 노력 강조
 - * 공급망 4대 품목 :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명시
 - 공급망 이슈는 IPEF와 APEP의 핵심 의제로 지목, 연내 지속 논의 전망
-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미-중 무역 관계 정립의 중요성 강조
 -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국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all available tools)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 관계의 재조정(Re-Aligning)을 위한 우방 국가들과 적극 협력 구상 시사

* 경제 3법(인프라법,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노력 강조

→ 인프라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8월 10일 서명한 법안으로, 약 1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도로, 다리, 철도, 공항, 항만, 인터넷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되며 미국의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수천 개의 새로운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 및 환경분야 개선에도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 반도체 과학법 :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2022년 8월 9일 '반도체·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과 첨단 반도체 R&D 지원(11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만 총 527억 달러(약 70조)를 지원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10년간 약 240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러나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우려국에서 특정 첨단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용량을 확장·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두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투자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반드시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 비시장적인 관행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통해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노력

□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정책 추진

○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며,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평하고 탄력적인 경제 성장 실현 노력

□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긴밀한 동맹국으로 평가

○ 무역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

- '21년 한미 FTA 공동위원회(KORUS Joint Committee) 소집, '22년 4월 노동위원회(Labor Affairs Council) 등 공동 노력을 명시하고,

- 향후 공급망 문제, 지속가능한 무역, 신형 기술,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 해결을 위한 협력 기대

< 연례보고서에서 언급한 '22년 한미 양국 간 회의 주요 논의 안건 목록>

(1) 미국의 육류 및 가공육 수출, (2) 한국의 유전자 변형 제품 수입허가 절차, (3) 한국 살충제 관련 리스트 제도, (4)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쿼터 관리, (5) 자동차 관련 규제, (6) 한국의 법률 서비스 개방 관련, (7) 금융 서비스업의 국경 간 데이터전송 의무, (8) 온라인 콘텐츠 시장 규정, (9)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조달 등

Ⅲ.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미국의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 의제와 미중 관계 변화 의지에 주목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일반인들을 무역 정책 중심에 두고 탄력성, 지속 가능성, 포용적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을 ‘선의의 힘’(force for good)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
 - 블룸버그 통신은
 - (1) 301조 대중관세 필요성 검토, (2) IRA 보조금 우려 해결을 위한 미국-EU TF 운영,
 - (3) USMCA 무역협정 분쟁 이슈 절차 착수, (4) IPEF 협상,
 - (5) 대만 이니셔티브 진전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하원 무역 소위원회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위원장은 미중 관계 조정을 위해서 “강제력 있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리적인 무역협정 협상이 중요하다”고 성명 발표
 -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23년 통상정책 의제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 수단(Tool)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지만,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현황 및 시사점 *

I. 서두

- 美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E.O.14017)을 통해 미국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함 ('22.2.24.)
 - (배경) 코로나19로 마스크·차량반도체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필수 품목의 공급망 안정 중요성이 대두됨
 - (지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① 100일 이내 4대 부문(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공급망 검토와, ② 1년내 6대 산업(국방, 공중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의 공급망 권고사항 도출을 요청

II.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현황 분석

1. 부문별 수입 동향

- ICT, 에너지, 공중보건 부문의 비중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임
 - '20~'21년을 제외하고 對세계 핵심품목 수입액 비중은 ICT > 에너지 > 공중보건 > 핵심광물 순
 - ICT, 에너지, 공중보건 부문 수입액 비중은 '17년 이후 대체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국가별 수입 동향

- 미국의 핵심품목 1~3위 수입대상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로 전체 수입 순위와 거의 동일
 -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수입대상국이며, 對중국 핵심품목 수입의존도는 '22년 1~8월중 19.8%로 동기간 對중국 전품목 수입의존도(16.9%)를 2.9%p 상회함
 - 미국의 전체 對中 수입비중은 하락했으나, 핵심품목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여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22.1~8월 기준 중국은 전체품목에서 2위국가와 3.0%p 격차를 보인 반면, 핵심품목에서는 5.7%p로 보다 큰 격차를 기록함
 - 한국은 전체품목 수입 7위, 핵심품목 수입 10위를 기록 중이며('22년 기준) 전체·핵심품목 수입비중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핵심품목 2,409개 중 156개 품목(6.5%)의 수입을 중국에 70% 이상 의존
 - 레늄(핵심광물), 유리섬유(에너지), 유선 카세트플레이어(ICT) 등 46개 품목*은 100% 중국으로부터 수입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 對中 수입의존 100% 품목: 레늄 스크랩·폐기물, 절연성 무색 유리섬유, 유선 카세트플레이어, 중저화질 TV 등
 - 對中 수입의존도 70% 이상 품목 156개 중 2/3 이상(113개)이 공중보건 제품이며, 핵심광물 품목이 7개로 가장 적음

3. 부문내 국가별 수입 동향

- (핵심광물·소재) 미국의 수입이 '21년부터 증가한 가운데, 對中 의존도는 2%에 불과
 -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은 '19~'20년중 감소하였으나, '21년부터 다시 급등
 -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의 국제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
 - * 알루미늄 가격(LME 3개월물, USD/ton): ('20.1Q) 1,712.79 → ('21.1Q) 2,106.17 → ('22.1Q) 3,269.40
 -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는 낮은 편으로 최근 對中 의존도가 더욱 하락하였음
 - 핵심광물·소재 부문 수입액 상위 5개 품목 중 4개가 알루미늄 관련이며,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
 - '22.1~8월중 해당 4개 품목 수입액이 핵심광물·소재 부문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9%에 달함
 - 수입액 상위 5개 품목의 최대수입국은 모두 캐나다로, 수입의존도가 최대 72.8%로 나타남
 -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핵심광물 품목은 아연, 망간, 텅스텐 등으로 수입액은 적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90%에 달함
 - 對중국 수입액이 크고 對中 의존도가 30% 이상인 핵심광물은 아연, 망간, 텅스텐, 비스무트, 바륨 등으로, 수입액 규모는 알루미늄 대비 5% 미만에 불과
 - 텅스텐 외와 황산바륨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각각 760만 달러, 540만 달러로 크지 않으나 수입의존도가 90.5%, 98.6%에 달하고 있음
- (에너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1년부터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對中 의존도는 대체로 8%대로 일정함
 - '22.1~8월중 對세계 수입액은 전력망 > 연료전지 > 대용량배터리 > 풍력 순으로 많았으며, 증가세는 백금족 금속(137.5%) > 전력망(67.6%) > 대용량배터리(63.2%) > 탄소포집(51.4%) 순으로 높았음
 - 동일 기간 對중국 수입액은 연료전지와 대용량 배터리의 비중이 75.1%에 달한 반면, 전력망 수입액 규모는 미미하였음
 - 부문별 對中 의존도는 백금족 금속(52.0%)과 대용량배터리(42.5%)에서 가장 높았음
- (ICT) 통신·네트워크 및 컴퓨터장비 수입이 대부분으로 對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임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對中 제재로 '19~'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2.1~8월중 50.8% 증가
 - '22.1~8월 기준, 컴퓨터장비(42.8%)와 통신·네트워크장비(39.2%) 하위부문 對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았음
 - 다만 모든 하위부문의 對中 의존도가 '18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對중국 반도체 수입액은 '21년부터 급증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원료인 천연흑연 수입 증가에 기인
 - 천연흑연 가격이 해당 기간 안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입액 증가는 물량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천연흑연은 미국의 중점 관리 품목이 될 수 있음
 - 컴퓨터장비 하위부문의 노트북은 미국의 연간수입액 상위 5대 핵심품목이면서 對中 의존도가 92~94%로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큰 품목임
- (공중보건) 모든 하위부문 對세계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개인보호장비 및 검사·진단 의약품 부문의 對中 수입의존도가 급등
 - '21년까지는 검사·진단 의약품, '22년부터는 검사·진단기구와 원료의약품(API)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짐
 - 개인보호장비(PPE)·내구성의료기기(DME) 수입은 '20년 팬데믹 발생 직후 급증하였다가 '21년 20%가량 감소했으나, '22.1~8월 다시 증가하는 변동성을 보임

- 전반적으로 對중국 수입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2.1~8월중 PPE·DME 의약품과 검사·진단 의약품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4~10배 증가
 - 이에 따라 해당 하위부문의 對中 수입의존도 역시 급등하여 향후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Ⅲ. 결론 및 시사점

- 美 상무부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미국의 미래 산업경쟁력 관련 품목을 다수 포함하며, 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은 탄소중립·그린전환 관련 광물과 에너지,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ICT,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으로 구성됨
 - 화석연료의 전기동력 전환과 아날로그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특정국에 편재된 원자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 최근 미국의 핵심품목 對中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 마련은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자국내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 핵심품목 리스트 4개 부문(▲핵심광물 및 소재·▲에너지·▲ICT·▲공중보건) 모두 산업전환과 연계성이 큰 만큼 향후 관련산업 공급망 재편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술 관련 공급망 블록화를 추진하는 '선별적 디커플링'에 유의할 필요
 - * 선별적 디커플링 : 미국이 추진하는 新공급망 체제로, △첨단산업은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저부가가치 기술을 활용하는 전통적 산업은 중국과 협력하는 생산구조를 이어가는 방식
-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핵심품목 리스트 내 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시장의 공익성 등 요소에 따라 상세 의견은 차이가 있었음
 - 신규 품목 포함 제안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업계가 실무적으로 체감하는 공급망 및 리스크가 더 넓고 다양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 차원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관리가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해소하여 美 산업계를 도울 수 있다는 시각과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가공하는 美 산업계에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갈리고 있으나 부정적 의견은 무선통신·배터리·의약품 등 일부품목에 국한
 - 특히 의료계의 경우, 시장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단순히 경제적 이윤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우리나라는 자원수입 기반의 제조강국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큰 만큼, 미국의 핵심품목 리스트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향후 미국이 핵심품목 리스트를 활용해 공급망 재편 시,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배터리, 반도체, 통신/네트워크장비 등 분야 참여를 검토하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임
 - 민관이 힘을 합쳐 일본·호주의 JAEPA 사례와 같은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체 참여, 수입선 다변화, 현지진출 등 경제안보 방안 수립에 힘써야 함
 - JAEPA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란 관세철폐·인하 외에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
 - JAEPA는 '15.1월 발효된 일본-호주간 경제연계협정으로 상호간의 수출제한조치 자제 조항 포함

* EU의 환경규제 *

I. EU의 환경정책 강화

- EU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아젠다 주도
 - 환경 및 기후목표를 경제·산업, 에너지, 금융, 농업 등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EU경제를 저탄소녹색경제로 체계적 전환
 - 2019.12월, EU 신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제시 이후 세부계획들이 발표
 - 기존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신규규제가 최근 대거 도입
- 동시에 EU만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및 기후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EU대외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

II.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

우선 기후변화 부문에서 10월 시범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품목에 수소와 나사, 볼트 등 하위품목과 직접배출 외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포함되었다.

기업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훼손 위험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 지침’도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EU 내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1월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은 비EU기업에게도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에 대한 강화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제품 생애주기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해당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및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신 배터리 규정’이 곧 발효 예정이다.

나아가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위험정보 전달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규정 (CLP)’ 개정작업이 이뤄지며 화학물질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III.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및 수출기업 대응전략

- 환경규제의 이행이 강제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 전반에 환경요소를 반영해야 함
 - (환경경영체계) 기업 경영목표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 시 환경경영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시행·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제품 혁신)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보다는 선제적으로 제품의 저탄소·친환경 혁신을 달성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전사적 실천) CEO부터 사원까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공급사슬, 조직관리 전반에서 친환경이 실천되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공급망 내 환경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필요시 대체공급망 발굴 등 공급망 재편을 검토할 필요
- 공급망실사 지침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대상 기업 혹은 1차 벤더업체들의 필요에 의해 유럽 바이어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ESG 역량을 내재화하고 특히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제품별 생애주기 정보를 수집·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해야 함
- 이때 자사의 환경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소재 및 부품의 탄소배출량이나 유해물질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협력사의 환경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시 공급망 재편을 검토

◆ EU, 미 IRA 대응 그린딜산업계획 발표

- 집행위,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 지원위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통신문 발표
-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 내용
 - 탄소중립 기술 및 제품 역내 생산 확대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 △투자,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탄소중립산업 지원 환경 조성
- ① 규제 간소화
 - 집행위는 관련 산업 지원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발표
 - 또한 탄소중립 제품의 생산성 및 시장 확대 위해 핵심 원자재법등 관련법안*을 동 계획과 연계 추진
 - * 대상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A-G로 분류, 라벨링(Energy labelling) 의무 도입해 주기적 검토 통해 효율 기준 상향, G 등급 이하 제품은 역내 출시 금지
- ② 투자 촉진
 - 청정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가속화 위해 기존 EU 기금의 용도 전환 및 사용 촉진 한편, 국가 보조금 승인기준 완화 제안
 - 이에 따른 단일시장 내 공정 경쟁질서 왜곡 우려 완화하기 위해 금번 승인기준 완화는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제한적 조치임을 강조
- ③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 육성
 - 관계 산업 일자리 수요 증가 및 모든 일자리의 35~45%가 녹색전환에 영향 받을 전망으로 관련 기술 및 디지털 교육 강화 계획
 - * 녹색전환 관련 일자리 '00년 320만개에서 '19년 450만개로 증가했으며 배터리 산업의 경우 '25년까지 추가로 80만명의 노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또한 관련 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해 국가 간 자격인정 개선 추진
- ④ 자유무역 통한 공급망 탄력성 확보
 - 녹색전환을 위해 WTO를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및 청정기술·탄소중립 산업 파트너십 확대
 - * EU는 상반기 내 호주와의 FTA 협상 완료 계획, 또한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및 메르코수르와의 FTA 요건 조율 추진

- 특히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 위해 원자재 소비국과 자원 보유국이 참여하는 핵심 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 Club) 창설 계획

□ 시사점

- 녹색 전환 위한 EU 보조금 및 산업 전반 투자 확대 전망
 - 미 IRA에 이어 EU 역시 관련 산업 유치 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확대 전망에 녹색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가속화 예상
 - 한편 역내 기술기업의 역외 투자 인수 방지 및 혁신기술 육성위해 EIB와 5개 회원국은 유럽 기술챔피언 이니셔티브 및 신규 펀드* 출시
 - * EIB(유럽투자은행)와 5개 회원국(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은 스케일업단계 혁신기업 지원 위해 신규 펀드 통해 총 37억 5천만 유로조달 예정
- 한편 IRA 견제위해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활용 가능, 우리기업 영향 유의
 - '23.1.12일 부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발효, 동 규제 통해 미국의 IRA를 비롯 역외국의 산업 보조금 견제 전망, 관련 업계 대비필요
 -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 EU는 역내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국가 보조금 규제 시행 중으로, 역외국의 보조금 통한 EU 시장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 보조금 규제 발효('23.1.12)
 - 기업결합, 공공조달의 사전신고 및 집행위 직권조사를 통해 역외 보조금의 역내 시장 왜곡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이에 일정 요건 충족하는 기업결합과 공공조달은 EU 신고 의무
 - 독일·프랑스도 당초 IRA에 강경 반대하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완화 주장했으나 이후 보조금 및 세액 공제 정책에 대한 투명성 요구*로 기조전환
 - * 독일·프랑스는 미국 방문(2.7)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공공보조금 및 세액공제 수준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 미국과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필요에 합의 및 관련 기술그룹 출범논의
 - 청정기술 산업의 표준 및 산업별 재생가능 요건에 주의 필요
 - 미 IRA와 달리 EU 보조금 정책에는 지역 차별적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관련 산업의 청정 기술 요건 및 수혜기준 상향 예상
 - 또한 히트펌프를 포함한 탄소중립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요건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 산업별 정책 모니터링 및 대비 필요

◆ 탄소중립산업법

탄소중립산업법이란 유럽연합(EU)이 2023년 2월 발표한 법규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 법안이다.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등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킨다.

(개요) 그린딜 산업계획 일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규제 간소화 및 기술 혁신 지원 위한 법률

*배터리, 풍력발전, 히트펌프, 태양열 발전, 수소 전해조,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 등

(주요 내용) △탄소중립 산업별 생산목표 수립, △규제 및 승인 절차별 제한 시간 설정, △청정기술 관련 규제 승인창구 일원화(One Stop Shop), △관련 기술의 유럽표준 설정, △기술혁신 지원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실험 자금 지원, △탄소중립 기술 사용 기업에 세금 감면, △공공조달 등의 인센티브 제공

◆ 핵심원자재법

- 탄소중립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보장위해 역내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안보강화, 바이오 기반 대체 기술 개발 지원

핵심원자재법(CRMA)은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한한 유럽연합(EU) 법안이다.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린다. 배터리용 니켈 · 리튬 · 천연흑연 · 망간을 비롯해 구리,갈륨,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가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전기차,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도 실시한다. 이는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3690억 달러를 투입하며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를, 신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의료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은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1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 EU의 배터리 시장 *

1. 배터리 산업의 특징

- 배터리의 적용영역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 로봇, 드론, 국방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 부상
 -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배터리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투자 확대 중
- (대규모 투자)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의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
- (수요 중심) 완성차 업체별/플랫폼별로 요구하는 배터리 셀의 제품 특성(화학적 조성, 폼팩터 등)이 달라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하는 산업
- (시장 구조) 완제품의 운송이 어려워 수요처 근처에서 최종 생산이 이루어지며, 글로벌 수요의 90% 이상이 중국, 미국, EU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현지 생산을 위한 해외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2.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 중국 기업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 EU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 IRA로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은 EU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미국은 IRA법을 통해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부터 조달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사용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
- 이미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으로 확보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EU 시장의 점유율 확보가 절실
 -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배터리의 특성상 EU 시장에서 밀리면 MES(Minimum Efficient Scale)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 불가피
 - * 캡티브 마켓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의 수가 제한된 시장을 의미. 중국 전기차 보조금의 한국 배터리 제외 이후 중국 기업의 자국 내 독점체제가 굳어짐
 - * MES(최소효율규모) : 기업의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생산량
-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에 힘입은 막대한 투자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추월당할 위기
 - 한국과 중국 간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 차이는 '20년 51%p에서 '22년 30%p까지 좁혀졌음
 - 향후 1~2년 내 유럽 OEM의 배터리 수주 물량을 둘러싼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가 중장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전망

3.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 최근에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23.2.1)을 발표하여 미국의 IRA,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제시

● 핵심원자재법 (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 EU 집행위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의 EU 중심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을 발표('23.3.16)
- (목표)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를 65% 이하로 완화
 - 전략원자재는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우주, 방산 등 4대 전략 분야에 필수적인 원자재 16종으로, EU 차원에서 국내 생산 확대, 전략적 비축 및 공동 구매 추진
- (주요내용)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최소 3년 주기로 전략원자재 공급망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 EU집행위는 개별 회원국의 전략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 실시 및 공공구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핵심원자재의 탄소발자국 계산 및 검증에 대한 규범 제정 등 추진
 - 전략적 기술 분야에서 전략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대기업에 대해 자체 공급망 감사의무 부과
 - 원자재 재활용 촉진, 폐기물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구자석 재활용 강화 등 규정

● 탄소중립 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 EU 집행위는 EU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배터리, 풍력, 태양광, 수전해 시설, 탄소포집 등 핵심 기술의 생산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발표('23.3.16)
- (적용대상) 배터리 등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8가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 8가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 및 해상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및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탄소포집 및 저장(CCS), △그리드(전력망)를 포함
- (주요내용) EU 국내 생산 목표 40% 달성 추진을 위해 아래의 특별지원 도입
 - 탄소중립 기술 프로젝트의 허가기간 단축, 프로젝트 진행창구 일원화
 - 탄소포집 저장기술 개발 지원
 - 공공조달사업에 탄소중립 기술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 기준 도입
 - 탄소중립산업 아카데미 설립 및 기술인력 양성
 - 탄소중립 혁신기술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4. 우리나라의 對EU 배터리 및 소재 수출 현황과 경제적 효과

- 현지 배터리 공장이 가동되면서 對EU 배터리 수출 증가세는 2019년 이후 둔화되었으나, 양극재 수출은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202% 증가
- 동박, 분리막, 전해액 등 소재의 경우 EU 현지에 공장이 건설되면서 일부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수출액 유지

-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제조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90%에 육박하며, 소재 및 부품도 30%에 달하여 EU 내 배터리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임
- EU 내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이 가동되기 전인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對EU 양극재 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에 유발된 생산액은 53.6억 달러, 부가가치액은 12.1억 달러, 취업인원은 11,75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 EU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분석

(1) 강점 - K배터리(제조, 소재, 재활용)의 높은 기술 경쟁력

-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EU 시장에 경쟁국보다 먼저 진출하여 오랜 시간 기술력을 검증받았음
 - 배터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전기차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통해 검증된 배터리 기업을 선호
 - 우리나라는 '17년부터 EU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22년 EU시장 점유율이 64%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 기업과 폭넓은 제휴경험 보유
- (소재)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면에서 우수한 삼원계(NCM, NCA 등) 양극재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확보
 - 니켈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안정성까지 확보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4대 기업(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엘앤에프) 모두 우리나라 기업임
- (재활용) 폐배터리와 배터리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스크랩을 수거, 분쇄해 중간가공품(블랙매스)을 제조한 뒤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습식공정을 통한 재활용기술을 가진 성일하이텍이 EU 지역(헝가리, 폴란드, 독일)에 22년부터 공장 가동 중

(2) 약점-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력 부족

- (자금력) 배터리는 수주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기업들은 투자 자금 부족으로 EU의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신속한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황
 -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EU 지역에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IRA 영향으로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EU 지역에 투자를 집중
 - OEM의 배터리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EM의 주문에 맞춰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동원력이 중요
 - 공장 건설 및 수율 확보를 위한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

(3) 기회 - EU 내 자체 공급능력 부족 및 공급망 관리 강화

- (EU 내 공급역량 부족) EU의 배터리 공급망 중에서도 특히 △광물 △소재 △장비 △재활용 분야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음
 - '30년까지 EU 내 예정된 배터리 공장증설 프로젝트에 비해 역내 배터리 장비업체 수가 매우 적어 국내 배터리 장비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

- (풍부한 재활용 원료) EU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2위의 거대 시장으로 LFP배터리를 포함해 폐배터리 물량이 풍부해 재활용 사업에 유리
 - 현재 국내외 많은 재활용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습식공정에 비해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금속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식 재활용기술과 향후 공급량이 더욱 증가할 LFP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 (강화되는 공급망 규제) EU의 환경, 노동, 재활용 관련 규제 강화는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우리나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탄소배출 저감, 재활용 의무비율 설정, 배터리여권 도입 등 EU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응하고 이를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차별화된 ESG 기준을 내세울 필요성

(4) 위협 -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높은 가격경쟁력

- (중국의 공격적 투자)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EU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부상
 - 중국의 21년 EU 시장점유율이 22.6%→ '22년 34.0%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1년 70.6%에서 '22년 63.5%로 하락
-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 LFP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NCM 분야에서도 부족한 기술력을 가격경쟁력으로 상쇄하면서 EU 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음
 - NCM 배터리보다 20~30% 저렴한 LFP배터리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소형 모빌리티, 저가형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중국의 배터리 제조 장비의 평균 가격은 한국의 약 80% 수준으로 배터리 완성품뿐만 아니라 장비시장도 중국 기업이 잠식할 가능성이 높음

6. 결론

- EU는 전기차 배터리를 탄소중립 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 EU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는 1.1TWh로 전 세계 수요의 23.4%를 차지할 전망이며, 공급도 EU의 생산능력 확대 노력으로 수요를 초과할 전망
- 일찍이 EU 시장에 진출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22년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 배터리의 주원료인 양극재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액은 '16년 617만 달러에서 '22년 46.7억 달러로 약 750배 증가
- 해외공장 가동을 통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국내에 창출

●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기회요인으로는

- (1) EU의 배터리 공급망 중 △광물 △소재 △재활용 분야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음
- (2) '30년까지 EU에 예정된 배터리 공장증설 프로젝트에 비해 EU 역내 배터리 장비업체 수가 매우 적어 국내 장비 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
- (3) EU 회원국별 투자여건과 우대정책이 달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 독일은 자동차 OEM 업체들과의 접근이 용이
 - 헝가리는 EU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음
 - 폴란드는 전체인구의 25%가 25세 미만으로 젊고 숙련된 인력을 보유
 - 스웨덴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값이 저렴하고 환경 리스크에 강점
- (4) IPCEI 등 EU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EU 역내 기업과 동반 참여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의 진출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IPCEI 선정기업은 광물 및 소재, 배터리 셀, 배터리 시스템, 재활용 분야 등 공급망 각 분야 및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들과 협업 시 정보획득에 용이하고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내 배터리 업계는 EU의 배터리 관련 지원책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EU측에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

7. EU시장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 배터리 기업이 완성차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력, 안정적인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과 설비 투자가 필요
-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충분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1) 자금 지원 확대

- 첨단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진흥기금'(가칭) 조성
 -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특수목적 기금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육성 및 보호를 명시한 분야에 한해 정책금융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 공여 한도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경쟁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투자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한하여 수출입은행 신용 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 추진

(2)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 현재 입법 추진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에 포함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핵심광물 확보 및 비축 확대 추진
 - 개별 분야 특별법 및 일반적 재정사업 지원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급망 지원 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

- 동 기본법에 규정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적극 운용하여 리스크가 큰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및 배터리 핵심광물의 비축 확대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현재 폐지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직접투자 기능을 회복하고, '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추진
 -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지질탐사 등을 공기업이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 확대 유도

(3)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
 - 최근 시황 악화, 대규모 투자 집행 등으로 배터리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세액공제의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혜택 수혜 불가
 - 법에 따라 공제액을 10년까지 이연할 수 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단기간에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려움
 - 광물 가공기술까지 투자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 확대
 - 현재 니켈 함량 80%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소재분야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이차 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
- 배터리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 미래 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배터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자 수출, 생산,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서,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해외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함
 -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
 - 중장기 EU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향후 1~2년 동안 배터리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가능성
 - 직접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같이 해외투자와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필요